

# 이웃나라의 식량안보 정책들

국가 식량안보정책의 핵심은 나라의  
식량이 모자라는 비상시를 대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고  
예산을 뒷받침하는 일이다. 우리와 가까운  
나라들은 어떤 식량안보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자.

[참고자료=(재)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국가 식량안보법 제정안 모델개발 연구보고서',  
국회도서관 '식량안보 한눈에 보기']



## 일본

### 국내 생산이 기본, 농산물 소비 강화

일본에서 식량안보는 국내 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수입과 비축을 적절히 조합해 활용한다는 원칙을 정해두고 있다. 국내 생산 장려 품목은 맥류, 대두, 사료작물 등으로 최근 사료용 쌀 생산도 늘리고 있다. 소비대책으로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소비하는 '지산지소' 운동을 비롯해 쌀가루 소비 확대를 장려한다.

#### #식량자급률 목표 45%

일본은 식량 자급률 목표를 열량기준, 중량기준의 품목별 자급률로 표시하고 있다. 이는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 규정한다. 2020년 발표한 '제5기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식량자급률 목표를 45%로 설정, 식량 국산율을 칼로리 기준으로 46%→53%, 생산액 기준으로 69%→79%로 향상시키는 목표를 담고 있다.



## 중국

### 식량안보는 지도자 능력의 잣대

중국의 식량안보 체계 역시 국내 생산이 핵심이며 추가적으로 식량비축체도를 구축하는 한편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입 확대와 수출 규제 등을 보완해 식량안보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식량안보의 달성에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 #곡물자급률 100% 목표 설정

중국 국무원은 2008년 7월 제정한 <국가식량안보중장기 계획요강(2008~2020년)>에서 2020년까지 식량자급률은 95% 이상, 곡물자급률은 100%를 유지하도록 하는 자급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자급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로 경지면적, 식량 재배면적, 식량 및 곡물 생산량 목표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각 지자체 '식량 성장책임제'

중국은 1994년부터 각 성(직할시, 자치구)의 행정 책임자가 해당 지역의 수급균형과 식량 가격안정을 책임지도록 하는 '식량 성(省)장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성급 지방정부 지도자에게 식량의 안정적 생산·유통·소비 등의 부분에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그 성과를 철저히 평가해 지도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중국 정부가 얼마만큼 식량안전을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최소한의 영양과 농가 변동성 완화**

미국 농무부(USDA)는 식량안보의 개념을 '최소한 영양적으로 적절하고 안전한 식품의 준비 가용성과 사회적으로 안정된 방법으로 허용 가능 한 식품의 확보능력의 보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농작물 위험과 가격 손해 보상

미국 농무부는 농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1년 11월에는 약 18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해당 지원금은 농작물 위험 보상(ARC)과 가격손해보상(PLC)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에 지급된다. 농가들은 이를 통해 손해 또는 수익 등의 변동 상황을 완화할 수 있다. 지원대상 품목은 매년 농가의 투표를 통해 선정되며, 2022년 7월 기준으로 보리·병아리콩·렌틸콩·귀리·땅콩·쌀·깨·콩·헤바라기씨·밀 등이다.

**주요국 식량안보 정책**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작물 위험 보상(ARC) 및 가격손해보상(PLC) 등 시장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li> <li>• 바이든 행정부의 농산물 수급 대책</li> </ul>
유럽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농업·식품 분야 지원 정책</li> <li>•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Farm to Fork Strategy)</li> <li>•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대응</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보장·공급법」 제정을 통한 위기 시 식량 공급 보장의 법제화</li> <li>• 연방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식량비축제도</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안보를 위한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과 '긴급사태식량안전보장지침'</li> <li>• 쌀, 밀, 사료곡물에 대한 농산물 비축제도</li> <li>• 정부의 해외 농업투자 촉진 정책 및 일본 전농의 해외농업개발</li> </ul>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안보를 위한 '3가지 식량바구니' 전략 - 수입원 다각화, 30×30 플랜, 국외 생산 지원</li> <li>• 쌀 및 일부 필수 품목에 대한 국가 비축 정책</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생산, 식량비축제도, 수입확대, 수출규제</li> <li>• 지방정부 역할 중시는 '식량 성장책임제'</li> </ul>